

노후희망유니온 토론회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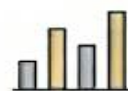
- 일시 : 2026. 5. 14(목) 오후 2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홀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노후희망유니온 토론회

- 일시 : 2026. 5. 14(목요일) 14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홀 
- 좌장 : 양재덕 (국민기본일자리포럼 상임대표)
- 발표 : 이상학 (정책위원장)
- 토론 



1.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2. 강익구
(60+기후행동 공동대표)



3.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참가문의 및 안내 : hopeunion@naver.com / 02-2068-0037

[진행 순서]

14:00 개 회

14:05 인사말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

14:10 발 표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
이상학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장

14:40 토 론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강익구 60+기후행동 공동대표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15:10 종합토론

15:50 폐 회

[발 표]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

이상학 노후희망유니온 정책위원장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 고령자 실태조사 결과 -

이 상 학 (노후희망유니온)

I. 조사 개요

○ 전반적인 개요

고령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지방정부, 노조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정책의 방향을 찾아보려는 목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베이몽키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눈덩이굴리기 방식으로 2026. 3. 23부터 4. 14까지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을 포함하여 실시되었다. 눈덩이굴리기 조사 방법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비확률 표집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어 본 조사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단, 300 표본 이상에서는 포화현상(saturation)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적 타당성과 신뢰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600을 넘었다는 점에서 편향성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는 621명으로, 남성이 68.6%, 비조합원이 71.7%, 수도권이 78.4%를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령대는 각 연령대 구간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65세 미만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연령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며,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전반적인 고령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 타 조사와의 비교

가구 구성과 관련하여,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1인 가구 32.8%, 부부 동거 55.2%, 자녀 동거가 10.3%였다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는 자녀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소득과 관련하여, 2023년 노인실태조사¹⁾에서의 노인 개인 연소득 2,164만원에 비해 높다. 소득원과 관련하여, 2023년 노인실태조사(가구)에서의 근로소득 29.3%, 공적이전소득 25.9%,

1)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조사에서는 10,078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였다. 다음 조사는 2026년에 실시된다.

사업소득 24.5%, 사적이전소득 8.0%과 비교하면 본 조사 결과는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고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낮다.

그리고 2024년 고령자통계에서의 공적이전소득 36-38%, 근로소득 31-32%, 사업소득 16-17%, 재산소득 15-17%, 사적이전소득 6-7%과 비교하여서도 본 조사결과는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높다.

[설문 응답자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참고 자료
성별	여성 195명(31.4%)	
	남성 426명(68.6%)	
연령	59세 미만 122명(19.6%)	
	60-64세 156명(25.1%)	
	65-69세 176명(28.3%)	
	70대 이상 167명(26.9%)	
노후희망유니온 노조원 여부	조합원 175명(28.3%)	
	비조합원 444명(71.7%)	
거주지역	수도권 487명(78.4%)	
	중부권 25명(4.0%)	
	호남권 48명(7.7%)	
	영남권 53명(8.5%)	
	제주강원 8명(1.3%)	
가구 구성	부부 동거 263명(42.4%)	(2023년 노인실태조사) 1인 가구 32.8% 부부 동거 55.2% 자녀 동거 10.3% ²⁾
	1인 가구 154명(24.8%)	
	자녀와 동거 173명(27.9%)	
	다세대 동거 25명(4.0%)	
	공동체형 주거 6명(1.0%)	
월 평균 소득	50만원 미만 22명(3.6%)	(2023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개인 연소득 2,164만원 ³⁾
	50-100만원 미만 90명(14.6%)	
	100-200만원 미만 163명(26.5%)	
	200-500만원 미만 284명(46.1%)	
	500만원 이상 57명(9.3%)	
주된 소득원	근로 사업소득 283명(45.8%)	(2023년 노인실태조사) 근로소득 29.3% 공적이전소득 25.9% 사업소득 24.5% 사적이전소득 8.0%
	연금(기초연금 제외) 212명(34.3%)	
	기초연금 67명(10.8%)	
	자산소득 37명(6.0%)	
	사적 이전소득 19명(3.1%)	

2) 본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가구 구성은 부부 동거 49.6%, 1인 가구 27.1%, 자녀 동거 20.4%, 다세대 동거 2.6%, 공동체 주거 0.3%

3) 본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소득 분포는 50만원 미만 2.3%, 50-100만원 18.8%, 100-200만원 30.2%, 200-500만원 41.6%, 500만원 이상 7.0%

II. 핵심적인 메시지

본 설문조사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노인들의 자존감.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 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 질문은 구조 방정식 분석에서 유의미한 맥락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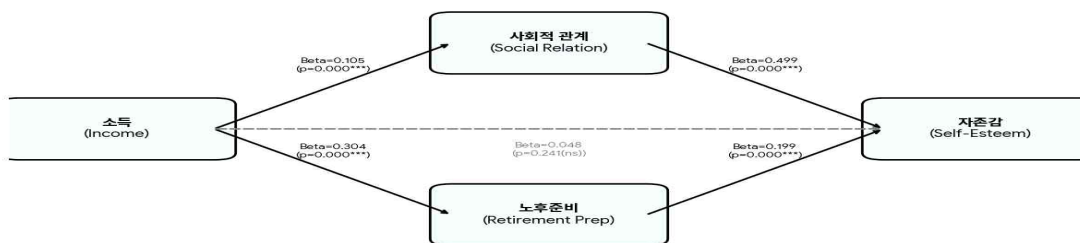
1) 노인의 자존감: 돈이 '사람'과 '안심'에 연결되어야

- 분석 결과, 소득이 자존감에 직접 주는 영향은 미미했다. 대신 소득이 사회적 관계와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감을 매개할 때 비로소 자존감이 높아졌다.

경제적 여유가 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때 자존감이 가장 크게 상승하여(계수 0.499) 사회적 관계의 힘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자존감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병행될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로 분석 결과 다이어그램 (Path Analysis Result)



- 다시 정리하면,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였다. 경제적 상태가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곧 노년기 자존감 형성의 핵심 동력이 된다⁴⁾. 그리고 소득은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하고, 이 심리적 안정감이 자존감을 높이는 유의미한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 그리고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 조사에서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⁵⁾. 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결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심리 지원과 사회적 역할 부여가 병행되어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즉, 단순한 수혜 대상이 아닌 사회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환경 조성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자존감을 높이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인들이 스스로의 삶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어 자살과 같은 노인 문제 해결에도

4) 임은의·구본진·임세현(2014), 조혜정(2019) 연구 참조.

5) 석소현 외(2008), 양재덕(2009), 박주원 외(2022), 김동배·손의성(2005), 남기민·박현주(2010), 김순분·이재모(2021), Morris Rosenberg(1965) 연구 참조.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수(β)	t값	p값	결과해석
소득→ 사회적관계	0.105	3.611	0.000	유의한 정(+)의 영향
소득→ 노후준비	0.304	6.485	0.000	유의한 정(+)의 영향
사회적관계→ 자존감	0.499	6.857	0.000	매우 강한 정(+)의 영향
노후준비→ 자존감	0.199	4.405	0.000	유의한 정(+)의 영향
소득→ 자존감(직접)	0.048	1.175	0.241	직접적인 통계적 유의성 낮음

2)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경로 분석 결과: 소득, 노후준비 및 기본소득 태도



-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는 현재의 소득 수준보다 '내가 느끼는 노후의 안정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노인일수록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소득이 높아서 기본소득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소득 덕분에 '노후 준비가 되었다'고 안심하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다.

-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는 정(+) 영향을 받고 있으며 (Beta=0.372, $p < .000$),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국가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Beta=-0.160, $p < .000$). 그렇지만 소득이 기본소득 태도에 직접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p=0.587$)은 미미하다. 대부분 노후 준비 정도를 매개로 하여 태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계수(β)	t값	p값	결과 해석
소득→ 노후준비	0.3715	9.782	0.000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
노후준비→ 기본소득태도	-0.1595	-4.442	0.000	매우 유의미한 부(-)의 영향
소득→ 기본소득태도(직접)	-0.0197	-0.543	0.587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소득 자체가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노후 준비 정도'라는 매개 변수를 거쳐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인 지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

- 기초연금을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기보다 하위 70%에게 차등 지급하자는 원칙에 대해, 경제적으로 준비된 노인일수록 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차등 지급'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객관적 소득 수치보다 본인이 스스로 체감하는 '경제적 안정감'이 정책 수용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경로 분석 결과: 소득, 노후준비 및 기초연금 태도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노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Beta=0.372, $p < .000$),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응답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정책에 대해 더 높은 찬성도를 보이고 있다(Beta=0.144, $p < .003$).

그렇지만 소득 자체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노후 준비 정도'라는 매개변수를 거쳐 정책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서도 객관적인 소득 수준 그 자체가 바로 행위자의 의사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을 거쳐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수(β)	t값	p값	결과 해석
소득→ 노후준비	0.3715	9.782	0.000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
노후준비→ 기초연금태도	0.1439	2.956	0.00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
소득→ 기초연금태도	-0.0765	-1.553	0.121	통계적 유의성 없음

- 기본소득에 대해 지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도 동의하는 서로 다른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⁶⁾.

4) 노인 존중 분위기

- 노인이 체감하는 '사회의 노인 존중 분위기'는 나이나 사회적 활동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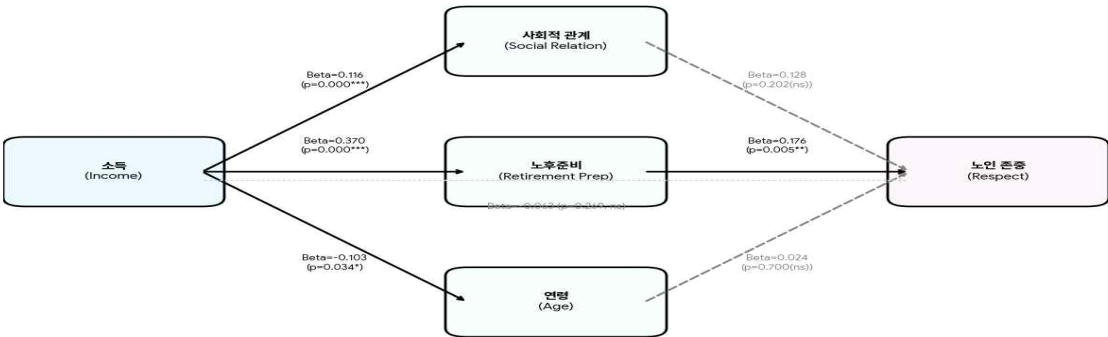
6) 이러한 현상에 대한 안상훈 외(2014), 김영순·여유진(2011), 박경하 외(2021)의 연구를 참고.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노후준비)'에 의해 좌우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소득은 노후 준비(beta=0.3696)와 사회적 관계(beta=0.1159)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을 수록 경제적 안도감과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⁷⁾.

한편 소득과 연령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beta=-0.1031)가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근로소득 등이 감소하는 일반적인 노년기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로 분석 결과: 소득, 매개변수 및 노인 존중 인식



	계수(β)	t값	p값	결과 해석
소득→ 사회적관계	0.1159	3.526	0.000	유의미한 정(+)의 영향
소득→ 노후준비	0.3696	6.952	0.000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
소득→ 연령	-0.1031	-2.125	0.034	유의미한 부(-)의 영향
노후준비→ 노인존중	0.1761	2.863	0.005	유의미한 정(+)의 영향
사회적관계→ 노인존중	0.1281	1.280	0.202	통계적 유의성 낮음
연령→ 노인존중	0.0241	0.385	0.700	통계적 유의성 낮음

5) 함의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소득 보전은 기본이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단순 수혜자에서 사회적 주체로’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객관적 빈곤 탈출만큼이나 "나의 노후는 걱정이 없다"는 심리적 확신을 주는 ‘심리적 안전망 구축’이 자존감 향상과 노인 문제(우울, 자살 등) 해결의 열쇠임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현주·이수범(2014), 최혜경(2010)의 연구 참고.

Ⅲ. 주요 변수 간 평균 비교

집단 간의 차이를 ANOVA 분석 및 T-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 집단 간 비교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1) 연령대

59세 미만, 60-64세, 65-69세, 70세 이상의 4개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서 평균을 비교하였다.

	F값	P값	통계적 유의성(0.05 기준)
정부의 고령화 대책 만족도	2.606	0.051	유의하지 않음(경계선)
사회적 목소리 창구 충분성	4.151	0.006	유의함
노인 존중 분위기 체감	6.315	0.0003	매우 유의함
지하철 등 배려 부족(격세지감)	7.297	0.0001	매우 유의함
월평균 소득 수준	6.738	0.0002	매우 유의함

- 사회적 목소리 창구 충분성

59세 미만(2.97점)에서 가장 높고, 65-69세(2.57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⁸⁾. 이는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드는 세대가 사회적 소통 창구의 부족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 노인 존중 분위기

59세 미만(3.20점)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존중한다고 느끼는 반면, 60대 이상 모든 그룹은 2.8점대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 '노인 존중'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 일상적 소외감 : 지하철 등 배려 부족(격세지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2.89점 → 3.21점 → 3.29점 → 3.45점)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체감도가 높아진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배려 부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제적 여건 : 월 평균 소득

59세 미만(3.74점)에서 70세 이상(3.23점)으로 갈수록 소득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 소득의 단절과 경제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양상이 데이터로 입증되었다.

- 정부 정책 만족도 (유의미하지 않음)

정부 대책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인 0.05를 근소하게 벗어났다. 연령대별로 점수 차이(3.06점~3.36점)는 존재하지만, 다른 문항들에 비해 집단 간 의견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8)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 이 보고서의 점수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되었다.

- 종합 평가

ANOVA 분석 결과, 정부 정책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대별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특히 소득 감소와 일상적 소외감(배려 부족)은 연령에 비례하여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고령화 정책 수립 시 단순히 노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보다, 경제적 활동력이 급감하고 소외감을 강하게 느끼는 고령층의 세부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응이 시급함을 말하고 있다.

2)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500만원, 500만원 이상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각 소득 집단의 응답자들의 답변 결과를 분석하였다.

	F값	P값	통계적 유의성(0.05 기준)
경제적 노후 준비 정도	36.622	0.000	매우 유의미함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부족 인식	10.909	0.000	매우 유의미함
나에 대한 존중감 체감	6.210	0.000	매우 유의미함

- 소득과 노후 준비의 정비례

소득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그룹의 노후 준비 점수는 2.17점인 반면, '500만원 이상' 그룹은 3.63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노후 준비 완성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높다. 이는 노년기 경제적 상태가 심리적 안정감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 기초연금에 대한 인식 차이

저소득층은 기초연금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초연금이 너무 적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 '100만원 미만' 그룹(4.09점)이 가장 강하게 동의했다.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3.39점으로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다.

- 경제력과 자존감의 상관관계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고 살고 있다"는 문항에서 '500만원 이상' 그룹은 4.03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100만원 미만' 그룹은 3.38점에 그쳤다. 소득 수준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심리적 태도(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종합 평가

ANOVA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은 노년기 경제적 준비 상태는 물론 정책(기초연금)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존엄성(자존감) 인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정책적 도움에 대한 갈증이 크고 자존감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복지 정책 수립 시 경제적 취약 계층의 심리적 케어와 실질적 소득 보전을 병행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3) 노조원 여부

노후희망유니온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비교하였다.

	조합원	비조합원	t 값	p 값	유의성
보편적 기본소득 찬성도	4.45	4.18	4.031	.000	유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	2.55	2.80	-2.906	.004	유의
기초연금생활 도움 부족 인식	3.97	3.57	5.226	.000	유의
정부 고령화 정책 만족도	3.09	3.27	-1.965	.050	경계선
사회적 모임 참여 수	1.61	1.46	1.864	.064	미흡
월평균 소득 수준	3.33	3.46	-1.491	.137	차이 없음
노년단체 구성 방향	0.57	0.50	1.498	.135	차이 없음

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

○ 보편적 기본소득 및 기초연금 : 매우 유의미한 차이

- 기본소득 찬성: 조합원(4.45점)이 비조합원(4.18점)보다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더 높은 찬성도를 보였다.
- 기초연금 부족 체감: 조합원(3.97점)은 비조합원(3.57점)보다 현재의 기초연금 액수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 평가: 유니온 조합원들은 현행 연금 제도의 불충분성을 더 크게 체감하며, 국가 주도의 보편적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노후준비 및 소득 : 유의미한 차이

- 노후준비 정도: 비조합원(2.80점)이 조합원(2.55점)보다 본인의 노후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 월 평균 소득: 두 집단 간 실제 소득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평가: 조합원들은 객관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서라기 보다, 상대적으로 본인의 경제적 노후 상태를 더 불안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안감이 노조 활동이나 정책 요구로 이어지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정책 만족도와 사회적 활동 : 차이 미미

- 정책 만족도: 조합원의 만족도(3.09점)가 비조합원(3.27점)보다 소폭 낮았으나 유의수준 0.05 경계에 있어 확실한 차이로 보기 어렵다.
- 모임 및 단체 구성: 사회적 모임 참여 수나 유니온 주도의 노년 단체 구성 방향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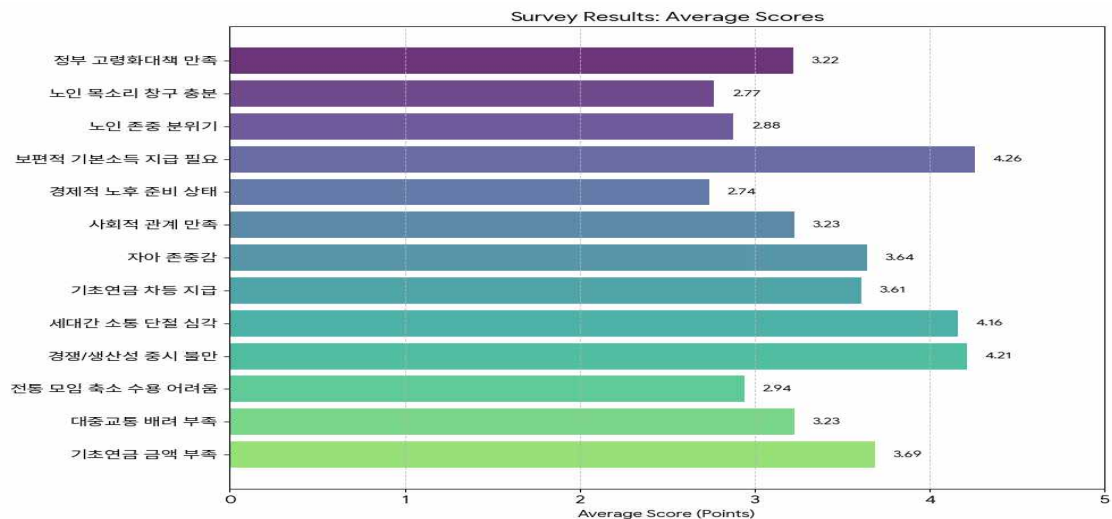
○ 종합 결론

- 분석 결과,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들은 비조합원에 비해 경제적 노후 안정성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낮고, 그 대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기초연금 현실화 등 국가의 공적 부양 책임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권리 지향적이고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IV. 전체 문항 통계

설문조사 중에서 중요한 문항의 통계를 정리한다.

1) 전반적인 사항



주)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계산.

-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

국가 주도의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4.26점)과 경쟁 중심 풍토에 대한 불만(4.21점)으로 나타나, 경제적 안전망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사회적 가치 변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뚜렷하다.

-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

경제적 노후 준비(2.74점)와 사회적 소통 창구의 충분성(2.77점)으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감이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 존중 및 배려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자존감(3.64점)은 비교적 양호하나, 사회 전반의 노인 존중 분위기(2.88점)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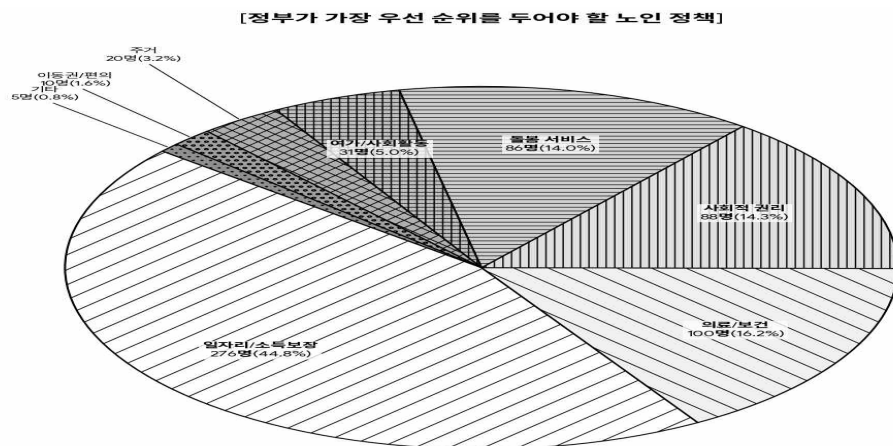
2) 정부 정책 우선 순위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노인정책은 일자리와 소득보장이다. 다음은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돌봄 서비스이다.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할 노인 대책 역시 일자리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장 우선 선위를 두어야 할 노인 정책]

	빈도	비율(%)
--	----	-------

돌봄 서비스	86	14.0
일자리/소득보장	276	44.8
의료/보건	100	16.2
주거	20	3.2
여가/사회활동	31	5.0
이동권/생활 편의	10	1.6
노인인권기본법 등 사회적 권리	88	14.3
기타	5	0.8
합계	616	100.0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소득보장(경제적 지원) 40-45%, 의료 및 건강 증진 25-30%, 돌봄 서비스 15-20%, 주거 지원 5-8%, 여가 및 사회 참여 3-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조사와 본 조사를 비교하면, 소득보장과 돌봄 서비스는 유사한 비율이지만 의료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다.

[지방정부가 시급히 추진할 노인 대책]

	빈도	비율(%)
기타	8	1.3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76	44.7
지역화폐 연계 수당	36	5.8
시니어 테크 육성	24	3.9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	53	8.6
노인 이동권 보장	16	2.6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82	13.3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86	13.9
세대융합 주거 모델 개발	37	6.0
합계	618	100.0

3) 돌봄 책임

돌봄책임에서 가족은 사라지고 있다. 가족에게 돌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6.2%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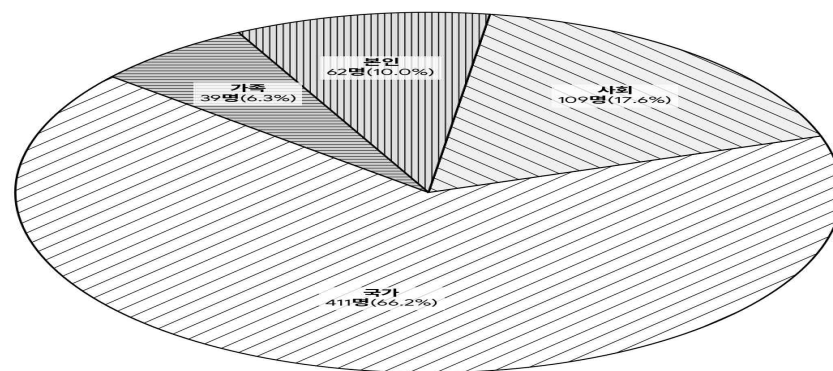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국가 책임이 60%를 상회하고,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서 본 조사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인 돌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빈도	비율(%)
국가	411	66.2
가족	39	6.3
사회	109	17.6
본인	62	10.0
합계	621	100.0

[노인 돌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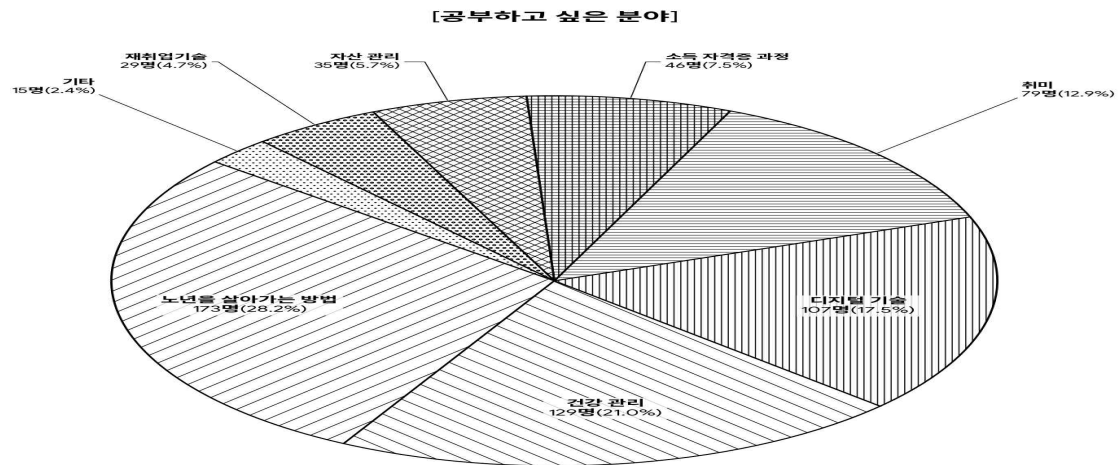


4) 공부하고 싶은 분야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이 건강 관리이다. 고령자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교육부의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등에서는 디지털 및 정보화 교육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었고, 건강과 보건 교육, 그리고 인문학 및 교양이 뒤를 이은 결과와 비교하면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부하고 싶은 분야]

	빈도	비율(%)
재취업기술	29	4.7
소득을 위한 자격증 과정	46	7.5
자산 관리	35	5.7
건강 관리	129	21.0
디지털 기술	107	17.5
취미	79	12.9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	173	28.2
기타	15	2.4
합계	6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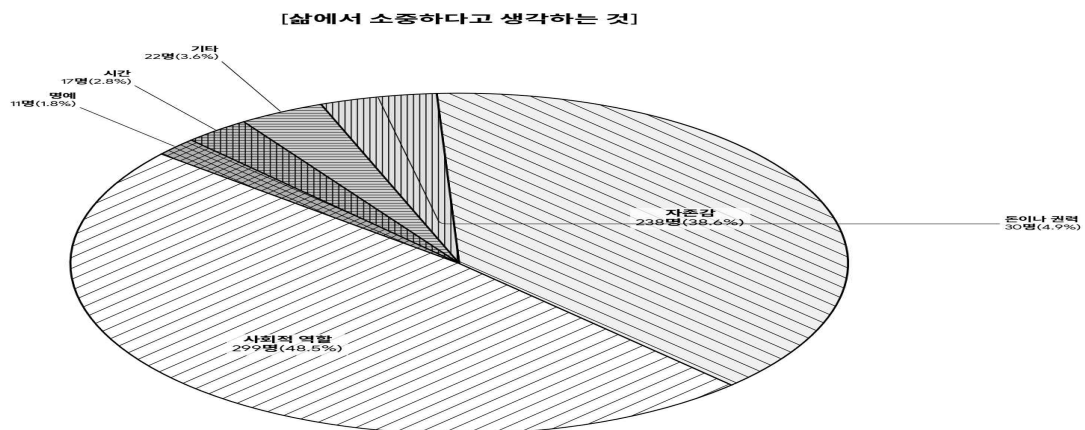
5) 삶에서 소중한 것

삶에 소중한 것으로 사회적 역할과 자존감이 절대적으로 높다. 87.1%가 사회적 역할이나 자존감이 소중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노인 세대들이 자신의 삶에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강한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빈도	비율(%)
기타	22	3.6
돈이나 권력	30	4.9
명예	11	1.8
자존감	238	38.6
사회적 역할	299	48.5
시간	17	2.8
합계	617	100.0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가지는 이미지와 대비된다. 노인은 보수적이고, 쇠약하며, 고집이 세다

는 이미지가 높다. 그런데 이 이미지는 사회가 만든 것이다. 노인 자신들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다.

[노인 이미지]

	빈도	비율(%)
기타	12	1.9
지혜로움	34	5.5
인자/관대	55	8.9
보수적	234	37.8
고집	139	22.5
쇠약함	145	23.4
합계	619	100.0

6) 세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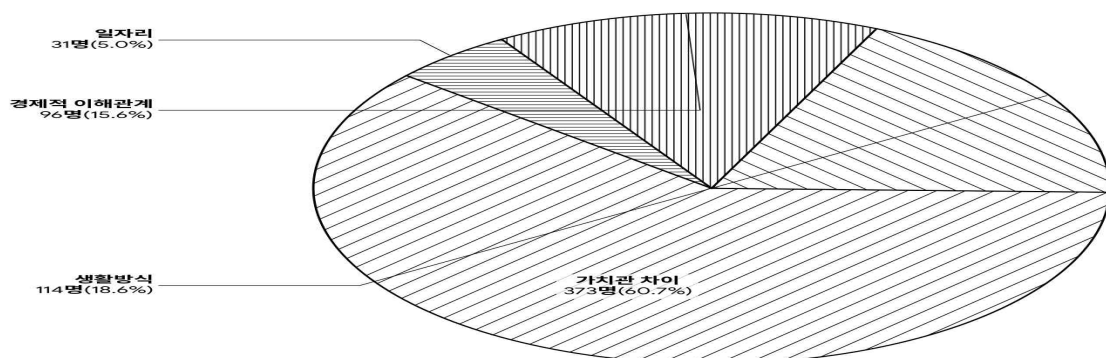
세대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가 60.7%로 높다. 반면에 일자리나 경제적 이해관계라는 응답은 낮다. 기존의 언론 등에서 제기하였던 갈등 요인에 대해서 고령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노인실태조사, 사회복지학계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차이, 경제적 자원 배분 갈등, 디지털 격차를 세대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빈도	비율(%)
가치관 차이	373	60.7
경제적 이해관계	96	15.6
일자리	31	5.0
생활방식	114	18.6
합계	614	100.0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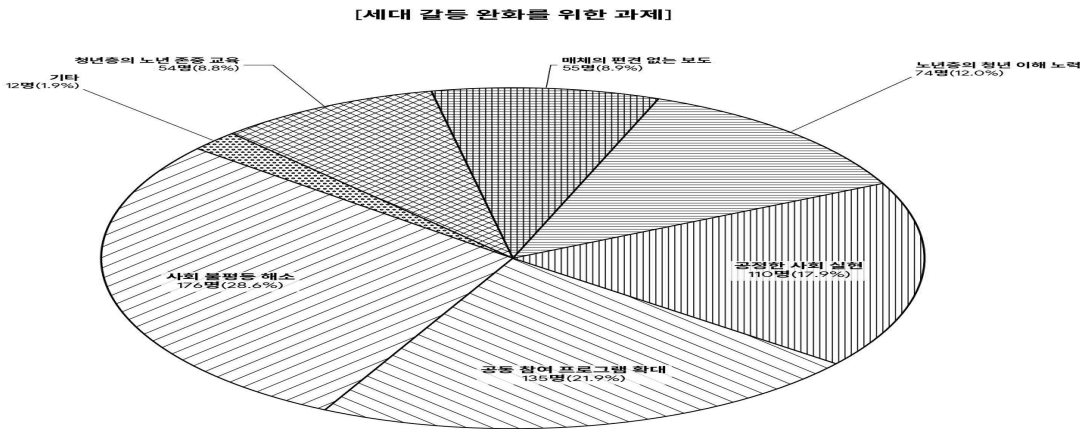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 실현에서 답을 찾고 있다. 46.5%가 이 해법에 동의하고 있으며 21.9%가 공동 참여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있다.

고령자들은 세대 갈등의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나 생활 방식 등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그 해법도 사회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사회 실현과 같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와 사회복지학계의 연구에서는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노인에 대한 이미지 개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정책 설계(백승호, 2020)를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세대 갈등 완화를 위한 과제]

	빈도	비율(%)
기타	12	1.9
노년층의 청년 이해 노력	74	12.0
청년층의 노년 존중 교육	54	8.8
매체의 편견 없는 보도	55	8.9
공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135	21.9
사회 불평등 해소	176	28.6
공정한 사회 실현	110	17.9
합계	6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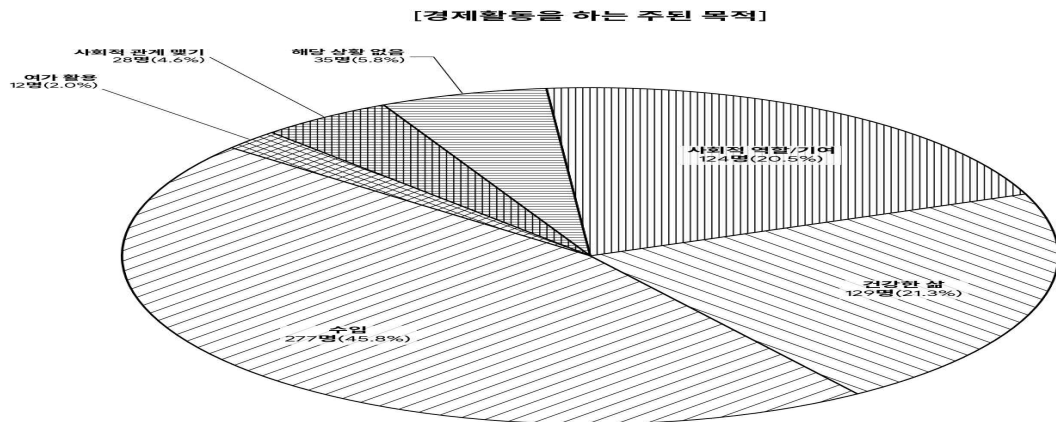


7)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

경제활동을 하는 목적에서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가 2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 조사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령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수입이 45.8%,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일하는 비율이 21.3%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

	빈도	비율(%)
수입	277	45.8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	124	20.5
여가 활용	12	2.0
사회적 관계 맺기	28	4.6
건강한 삶을 위해서	129	21.3
해당 사항 없음	35	5.8
합계	6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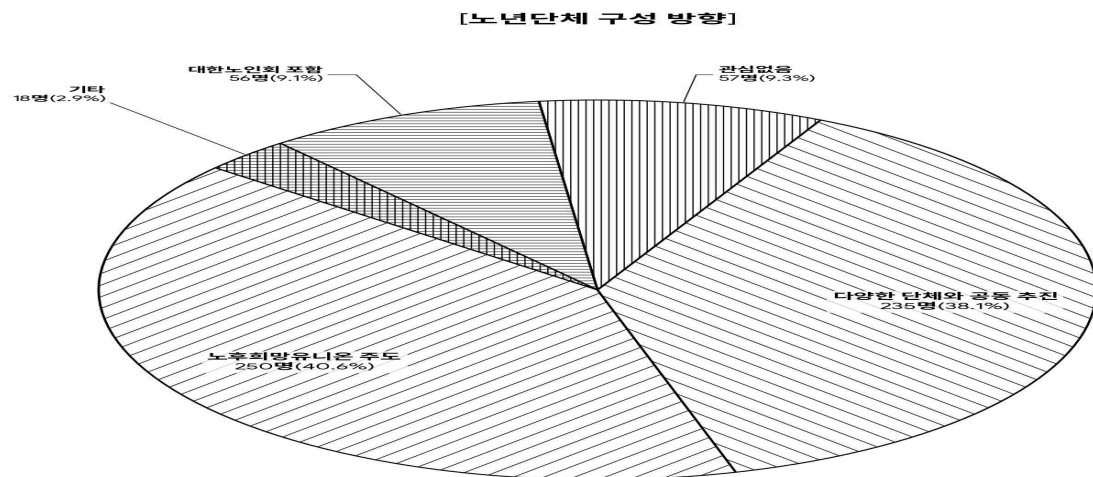


8) 노년단체 구성

노년단체 구성에 대해서는 노후희망유니온의 주도적 역할과 다양한 노년 단체와 공동 추진이 비슷하다.

[노년단체 구성 방향]

	빈도	비율(%)
기타	18	2.9
노후희망유니온이 주도하는 노년단체	250	40.6
다양한 노년단체와 공동 추진	235	38.1
대한노인회 포함한 노년단체	56	9.1
관심없음	57	9.3
합계	6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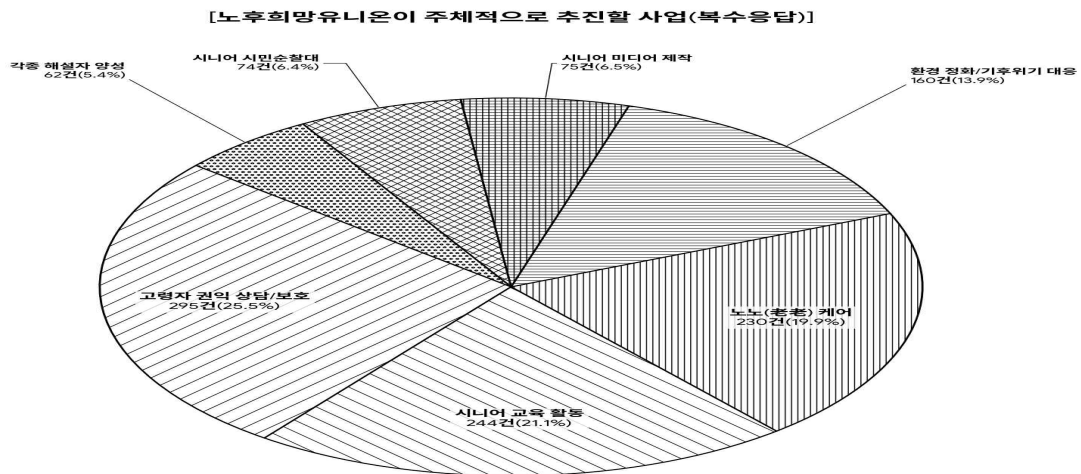


9) 노후희망유니온 사업

노후희망유니온의 주체적 사업으로는 고령자 권익 상담 및 보호 활동, 그리고 시니어 교육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의 조사에서 고령자들이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희망유니온에서 이러한 교육활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노후희망유니온이 주체적으로 추진할 사업(복수응답)]

	빈도	비율(%)
고령자 권익 상담 및 보호 활동	295	25.5
시니어 교육 활동	244	21.1
노노(老老) 케어	230	19.9
환경 정화/기후위기 대응	160	13.9
시니어 미디어(유튜브, 지역 방송)'제작	75	6.5
시니어 시민순찰대	74	6.4
각종 해설자 양성	6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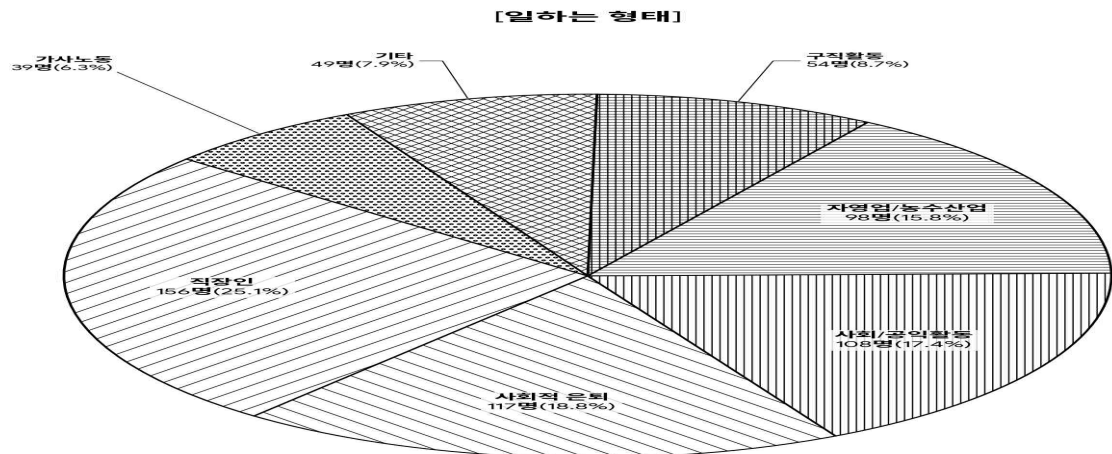


10) 일하는 형태

80% 이상이 사회적 은퇴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일하지 아니하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하여 일하고 있는 한편, 17.4%는 사회공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하는 형태]

	빈도	비율(%)
직장인	156	25.1
자영업/농수산업	98	15.8
구직활동	54	8.7
가사노동	39	6.3
사회/공익 활동	108	17.4
사회적 은퇴	117	18.8
기타	49	7.9
합계	6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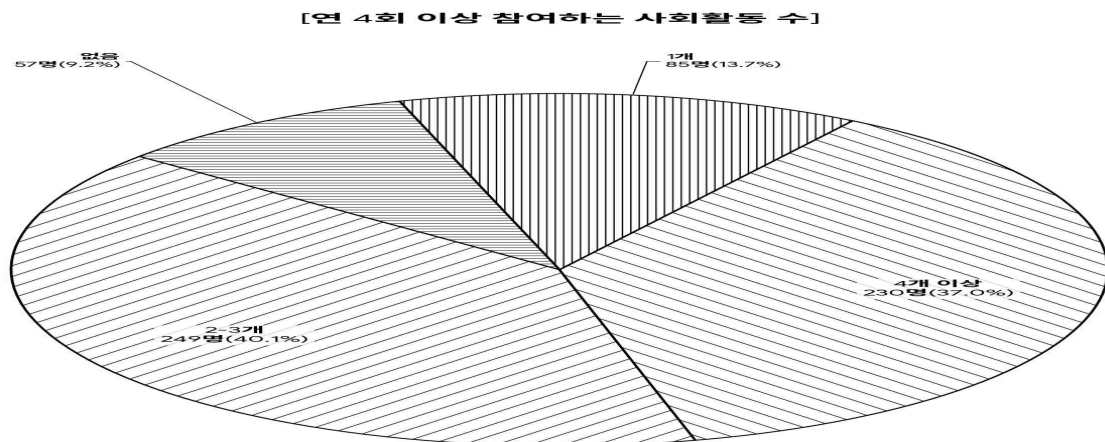
11) 사회활동

설문에 응답한 고령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90% 이상의 고령자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80% 정도의 고령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 실버라는 말이 확인되는 결과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조사,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 등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80% 이상이 최소 하나 이상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 참여 모임 수는 1.6-1.8개 수준이다. 모임의 참여 정도는 친목 모임이 65-70%, 종교활동 모임 25-30%,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20-25%, 여가 및 문화 모임 10-5%로 나타났다.

[연4회 이상 참여하는 사회활동]

	빈도	비율(%)
1개	85	13.7
2-3개	249	40.1
4개 이상	230	37.0
없음	57	9.2
합계	621	100.0



V. 마무리

○ 요약

- 고령자들의 행복한 삶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노인들의 자존감은 사회적 활동과 노후 준비에 대한 본인의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소득 수준을 비롯한 경제 상태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경제 상태가 사회활동 참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노인들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자존감은 경제 상태가 사회활동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매개로 할 때 그 효과가 뚜렷하여진다. 따라서 고령자 대책은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 교육 활동이 중요하다.
- 현 시기 고령자들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삶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액티브 노년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삶에서 사회적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자존감에 매우 민감하다.
- 사회가 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인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 변화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동요 등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경제활동을 하여야 하는 고령자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사회적 은퇴를 한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
- 국가의 고령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소득 보장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인들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정책 시사점

- 이러한 결과는 노인복지정책이나 노인일자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한 일자리/소득정책 보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 공간과 결합 될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자리/복지가 노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이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노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자살이나 노인 소외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과 관련된 문제는 노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서 노인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의 사회활동을 결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주도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인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분명히 하여 불안감을 줄여주는 복지/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노인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 그리고 연구결과에서는 현시기 노인들이 액티브시니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는 다르게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에 대한 기여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찾고 있다.

세대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어른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바라보는 세대 사이의 이해 충돌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 또한 현시기 노인들은 여전히 활동적이고 사회에서의 역할을 원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매우 좁다. 노인의 에너지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구본진, 임세현 (2014). 노인의 소득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7).
- 김동배 · 손의성(2005).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한국노년학회)
- 김순분 · 이재모(2021).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저치학회보. 29(1).
- 남기민 · 박현주(2010). 노인의 종교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
- 박주원 외(2022). 중고령자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변화 및 영향 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백승호(2020). 기본소득 정치의 가능성: 기본소득 태도와 복지국가 태도. 비판사회정책(제67호)
- 석소현 외(2008). 재가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0). 서울시 노인의 이동권과 건강 안녕감의 관계.
- 양재덕(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현주 · 이수범(2014). 노인의 주관적 노후준비가 사회적 자본과 세대 통합 인식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 조혜정 (2019).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 여부가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4).
- 최혜경(2010). 노년기 노후준비와 사회적 지원 인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한국노년학회).
- 한형수 (2011). 노인의 경제상태, 사회활동 참여 및 건강상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 Morris Rosenberg(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설문지] 초고령사회 노인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

1. 다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	동의	보통	동의 않음	전혀 동의 않음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창구가 충분하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다.					
국가가 노인에게 최소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나는 경제적으로 노후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나는 현재의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나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기초연금을 하위 70%에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세대 간 소통 단절이 심각하다.					
경쟁과 생산성 가치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불만이다.					
명절이나 제사 등 전통적인 가족 모임이 축소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하철 등에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 격세지감을 느낀다.					
기초연금은 금액이 너무 적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3. 평소 '노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 ☐ 지혜로움
☐ 인자/관대함
☐ 보수적
☐ 고집
☐ 쇠약함
☐ 기타

4. 현재 주된 소득원은 무엇인가요?

- ☐ 근로소득/사업소득
☐ 연금(기초연금 제외)
☐ 기초연금
☐ 자산소득
☐ 자녀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

5. 세대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가치관 차이
☐ 경제적 이해관계(연금 등)
☐ 일자리
☐ 생활 방식

6. 세대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 ☐ 노년층의 청년 이해 노력
- ☐ 청년층의 노년 존중 교육
- ☐ 매체의 편견 없는 보도
- ☐ 공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 ☐ 사회 불평등 해소
- ☐ 공정한 사회 실현
- ☐ 기타

7. 정부가 노인 정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는?

- ☐ 돌봄서비스
- ☐ 일자리/소득보장
- ☐ 의료/보건
- ☐ 주거
- ☐ 여가/사회활동
- ☐ 이동권/생활 편의
- ☐ 노인인권기본법 등 사회적 권리
- ☒ 기타

8. 귀하의 현재 일하는 형태는 어떠합니까?

- ☐ 직장인
- ☐ 자영업/농수산업 등
- ☐ 구직활동
- ☐ 가사노동
- ☐ 사회/공익활동
- ☐ 사회적 은퇴
- ☐ 기타

9. 귀하는 현재 소득을 위한 일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 ☐ 예 => 10번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 ☐ 아니요 => 11번 질문으로 이동하세요

10.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임금 수준
- ☐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
- ☐ 근무 조건(근무시간 등)
- ☐ 직장 분위기
- ☐ 직무 성격

11. 귀하가 경제활동을 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 ☐ 수입
- ☐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
- ☐ 여가 활용
- ☐ 사회적 관계 맺기
- ☐ 건강한 삶을 위해서
- ☐ 해당 사항 없음

12. 가장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 ☐ 재취업 기술
- ☐ 소득을 위한 자격증 과정
- ☐ 자산 관리
- ☐ 건강 관리
- ☐ 디지털 신기술
- ☐ 취미
- ☐ 노년을 살아가는 방법
- ☐ 기타

13. 현재 연 4회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모임(종교, 동호회 등)이 몇 개입니까?

- ☐ 1개
- ☐ 2-3개
- ☐ 4개 이상
- ☐ 없음

14. 노인의 돌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 국가
- ☐ 가족
- ☐ 사회(마을 공동체 등)
- ☐ 본인

15.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제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 ☐ 현행 유지
- ☐ 연령 상향
- ☐ 저소득 노인에게만 적용
- ☐ 바우처로 전환
- ☐ 혼잡 시간대만 유료화

16.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을 사용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마음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 ☐ 알 수 없는 조작 방법
- ☐ 실수에 대한 두려움
- ☐ 타인의 시선
-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 없음
- ☐ 기계에 대한 거부감
- ☐ 마음의 부담 없음

17. 지방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는 가장 시급한 노인대책은?

-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 ☐ 지역 화폐 연계 수당
- ☐ 시니어 테크 육성
- ☐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
- ☐ 노인 이동권 보장
-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 ☐ 시니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세대융합 주거 모델 개발
- ☐ 기타

18. 노후유니온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사업은?

두 개 까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복수응답 가능)

- ☐ '노노(老老) 케어'
- ☐ '시니어 미디어(유튜브, 지역 방송)'제작
- ☐ '시니어 시민순찰대'
- ☐ 환경 정화/기후위기 대응
- ☐ 각종 해설자 양성
- ☐ 고령자 권익 상담 및 보호 활동
- ☐ 시니어 교육 활동
- ☐ 기타

19. 노년단체를 구성하려면 어떤 방향이 가장 적절할까요?

- ☐ 노후희망유니온이 주도하는 노년단체
- ☐ 대한 노인회 이외의 다양한 노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
- ☐ 대한 노인회를 포함한 노년단체
- ☐ 관심 없음
- ☐ 기타

20.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 돈이나 권력
- ☐ 명예
- ☐ 자존감
- ☐ 사회적 역할
- ☐ 시간
- ☐ 기타

21. (위의 질문과 답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가장 시급한 노인 정책이 있으십니까? 생각하시는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주관식)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

22. 귀하의 연령은?

- ☐ 50대 미만
- ☐ 50-54세
- ☐ 55-59세
- ☐ 60-64세
- ☐ 65-69세
- ☐ 70대
- ☐ 80대 이상

23. 귀하의 성별은?

- ☐ 여성
- ☐ 남성
- ☐ 기타

24. 귀하가 주거하시는 지역은?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 중부권
- ☐ 호남권
- ☐ 영남권
- ☐ 제주와 강원

25. 귀하의 가구 구성은?

- ☐ 부부 동거
- ☐ 1인 가구
- ☐ 자녀와 동거
- ☐ 다세대 동거
- ☐ 공동체형 주거

26. 귀하는 노후희망유니온 조합원이십니까?

☐ 예

☐ 아니오

2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기초연금, 자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

☐ 50만원 미만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0만원 -200만원 미만

☐ 200만원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토론 1]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토론문>

복지의 수혜자에서 사회적 주체로

- 설문이 확인한 것, 정책이 아직 모르는 것 -

고현종 (노년유니온 위원장)

I. 이상학 위원장 발제에 대하여

이상학 정책위원장의 발제는 621명의 목소리를 통계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어 있던 노인들의 실제 삶의 논리를 드러낸 작업이었다.

방법론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눈덩이굴리기 방식의 비확률 표집이라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300 표본 이상에서 포화현상이 확인되었고 전체 표본이 600을 넘었다는 점에서 내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정직함이 오히려 이 조사를 신뢰하게 만든다.

소득이 자존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경로분석 결과($\beta=0.048$, $p=0.241$)는 지금까지 노인정책의 전제를 흔드는 발견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난하니까 불행하다'는 등식 위에 정책을 쌓아왔다.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 위에 기초연금 인상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노인일자리 정책도 단가 인상에 집중해왔다. 이 조사는 그 등식이 절반만 맞다고 말한다.

소득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미래를 안심하게 할 때 비로소 자존감으로 전환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문제다. 이 단순하고도 묵직한 발견에 깊이 동의하며,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으로서 몇 가지 논점을 보탠다.

II. 세 가지 논점

첫째, 노인은 이미 주체다. 정책만 아직 모른다.

이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87.1%다. 10명 중 9명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사

회적 역할'(48.5%)과 '자존감'(38.6%)을 꼽았다. 돈이나 권력을 선택한 비율은 4.9%에 불과했다. 명예를 택한 사람은 1.8%였다.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놀랐다. 그러나 곧 놀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들을 오래 만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이 가장 생기 있게 이야기하는 순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때다. “내가 그 아이 공부를 도와줬어요”, “우리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맡았어요”라고 말할 때 목소리가 달라진다.

우리 사회가 노인을 보는 시각은 어떤가. 이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노인 이미지로 선택한 것은 '보수적'(37.8%), '쇠약함'(23.4%), '고집'(22.5%) 순이었다. '지혜로움'은 5.5%, '인자/관대'는 8.9%에 그쳤다. 노인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사회가 부여한 노인의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크다.

이 간극이 노인 소외의 본질이다. 사회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고, 그 규정이 다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한다. 노인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정책은, 노인을 참여시켜야 할 주체로 보지 못한다.

노년유니온이 "복지의 수혜자에서 생산자로"라는 방향을 내걸었을 때, 많은 이들이 이상론이라 했다. 복지 수혜자가 어떻게 생산자가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그것이 이상이 아니라 이미 노인들이 가진 실제 욕구임을 확인해준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도, 지하철 택배를 하는 어르신도, 따릉이 안전을 지키는 어르신도, 그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싶어서다. 노인들은 이미 주체가 되고 싶어 한다. 정책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을 뿐이다.

둘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노인정책으로 '일자리/소득보장'(44.8%)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방정부 시급 과제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44.7%)가 1위였다. 이 수치는 매년 유사한 조사에서 반복된다. 노인들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목적을 물었더니 '사회적 역할이나 기여'가 20.5%였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가 21.3%였다. 순수하게 수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45.8%였다. 달리 말하면, 일하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돈 이상의 무언가를 일에서 찾고 있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이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다는 확인이다. 그런데 현재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지나치게 단순 노무 중심이다. 일은 시키되, 역할은 주지 않는다. 월 29만 원 남짓의 공익활동비를 받으며 화단에 물을 주고 공원 쓰레기를 줍는 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이 나쁜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오래 일하며 발견한 것이 있다. 어르신들이 가장 생기 있게 일하는 순간은 월급날이 아니다. 누군가가 “덕분에 도움이 됐다”고 말해주는 날이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하는 어르신이 “오늘 문이 안 열려서 신고했더니 쓰러져 계셨대요. 내가 살린 거 아닌가요?”라고 말할 때의 표정은, 어떤 수당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 자존감이 곧 이 조사가 말하는 ‘사회적 관계를 매개로 한 자존감’이다.

이상학 위원장이 제시한 ‘사회활동 결합형 일자리’ 방향은 그래서 옳다. 지역사회 안에서 노인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돌봄과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일자리로의 전환 없이는 소득을 늘려도 자존감은 따라오지 않는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단가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그 일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이 조사에서 80% 이상의 고령자가 사회적 은퇴를 하지 않고 일하고 있으며, 17.4%는 사회공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에너지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세심하게 설계하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은 수사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핵심이어야 한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주관적 심리적 안정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경로($\beta=0.19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런데 응답자의 경제적 노후 준비 점수는 2.74점으로 조사 전체 문항 중 최하위였다. 사회적 소통 창구의 충분성은 2.77점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노인들이 가장 못 갖추고 있는 두 가지가, 삶의 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역설이다.

이 조사의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객관적 수치보다 주관적 인식이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 태도도, 기초연금에 대한 입장도, 노인 존중 분위기 체감도 모두 실제 소득 수준보다 “나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금 노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단순히 오늘의 소득이 적어서만이 아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나라가 나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중장기 노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치료 행위다. “우리는 당신이 늙어도 이렇게 책임지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는 예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의 태도 문제다.

넷째, 세대 갈등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조사에서 세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령자들이 지목한 것은 ‘가치관 차이’(60.7%)였다.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즐겨 사용하는 ‘일자리 경쟁’(5.0%)이나 ‘경제적 이해관계’(15.6%) 프레임과는 거리가 멀다.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도 ‘사회 불평등 해소’(28.6%)와 ‘공정한 사회 실현’(17.9%)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령자들은 세대 갈등의 원인을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다. 노인 때문에 청년이 어렵고, 청년 때문에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프레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세대갈등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노인 세대 스스로의 답변이다.

우리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다룰 때도 이 관점이 필요하다. 노인 무임승차가 청년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냐는 프레임이 아니라, 노인 이동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이냐는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세대를 적으로 만드는 정치는 결국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Ⅲ. 정책 제언

첫째, 노인일자리를 '소득 지원'에서 '사회참여 보장'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역할 참여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권리로서의 노인일자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14.3%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를 지역사회 기반 커뮤니티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단순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노노(老老) 케어, 시니어 교육 활동, 환경 기후 대응 등 노후희망유니온 조사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으로 꼽은 영역들이 그 방향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 권익 상담 및 보호 활동(25.5%), 시니어 교육 활동(21.1%), 노노 케어(19.9%)가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셋째, 심리적 안전망 구축을 정책의 핵심 목표로 명시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노인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공표해야 한다. “10년 뒤에도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돌볼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기 현금 급여 확대와 함께, 노인들의 미래 불안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제시가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돌봄 책임의 국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66.2%에 달한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60%를 상회하는 같은 흐름이 확인되었다. 가족 돌봄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가족에게 책임을 미루는 방식의 돌봄 정책은 이미 시대착오다.

다섯째, 노년단체의 역량을 정책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응답자의 78.7%가 노후희망유니온 주도 혹은 다양한 노년단체와의 공동 추진 방식을 지지했다. 노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조직적 역량이 현장에 있다. 그 역량을 자문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는 관계 전환이 필요하다.

IV. 마무리

노후희망유니온의 조합원들에게 조사팀이 던진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선택된 답은 ‘사회적 역할’이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까지 노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슷한 답을 수없이 들었다. 생전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을 이야기했다. ‘내 생애 마지막 기부클럽’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워 모은 돈으로 기부를 결정할 때 보이는 표정은, 그 어떤 복지 수혜의 순간과도 달랐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그것을 우리는 정책의 언어로 ‘사회적 역할’이라 부르고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조사가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다. 노인이 사회 안에서 역할을 갖고, 관계를 맺고, 미래를 안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행복해진다. 소득이 사람으로, 사람이 안심으로, 안심이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정책이 설계해야 한다.

그것은 노인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늙어가는 사회,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토론회가 그 질문에 답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토론 2]

강익구 60+기후행동 공동대표

<토론문>

‘행복한 노년, 어떻게 가능할까?’ 토론문

강익구(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들어가면서

<핵심 메시지>

- 1) 자존감 : ‘돈독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든든한 노후준비를 마쳤을 때 자존감이 높다’
⇒ (정책 함의)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회운영의 주체로 보고 정책체계를 설계하도록 시사
- 2)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주관적
⇒ 노인만의 대상이 아님. 기초연금과 연계
- 3) 기초연금 지급방식 : 현 소득분위 하위 70% 차등 지급에 대해 노후 준비 정도에 따라 입장의 차이 존재 ⇒ 사회적 노후 준비체계(보편적, 제도적 복지 체계)의 구축 필요
- 4) 노인 존중 분위기 : 노후 준비(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됨 ⇒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소득 보전 필요.

□ 노인 정책의 방향과 관련

- 정부 노인 정책의 목표는 대체적으로 ‘노후불안해소’와 ‘월예징’으로
- 그만큼 노인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
- 노후불안은 ①노후소득 불안 ②노후건강 불안 ③노후돌봄 불안 ④사회적 관계 및 역할의 상실로 구분할 수 있음.

- 이를 노후 안정망의 개념으로 보면,
 - ①노후소득보장체계
 - ②노후공공의료체계
 - ③노후돌봄-사회서비스체계
 - ④노후 커뮤니티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음

이중 노후소득불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

노후 소득불안의 경우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

- 1) 빈곤/건강악화 겹쳐 자살
- 2) 가족에 의존하는 가족복지 ; 지금은 가족해체 중
- 3) 기업에 의존하는 사회복지 : 기업복지 성격이라 점점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감. (완전고용 전제, 정년제 폐지)
- 4) 스스로 일자리 찾는 길 : 저임금 비정규직이 해법일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이름하여 'K자 성장'으로 표현되는 형국으로 진행됨.

노인영역으로 그대로 이동,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확대, 빈곤노인층 증가, 반면에 노후준비 탄탄한 팔팔한 노인들 등장

다양한 접근 필요(++층, +-, --층, --층 구분 적용)

그러면서도 일자리는 중요

일자리 수요 : 2025년 실적 109.8만명, 2026년 목표 115.2만명

노인일자리 추진방향은

- 양적 확대
- 공공형 일자리의 질적 제고 :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 영향력 강화, 사회서비스형 확대 등
- 민간 일자리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
 - 직업훈련 및 리커런트 교육의 확대 강화. 연령통합 및 생애 단계의 다중화의 기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폴리텍대학 전국 41곳, 지자체 운영의 기술교육원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영역 진입과 여러 가지에서 변화

- 정치세력화가 가능. 실버 민주주의 등장을 예고.
시니어노동조합(한국노총), 노년유니온(종로시니어클럽), 노후희망유니온(민주노총)
- 사회권으로써 노후복지정책 강화를 주장할 것
-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권리와 독립, 참여, 존엄성,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등을 제시할 것.

[토론 3]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초고령사회, 무시되고 있는 노인의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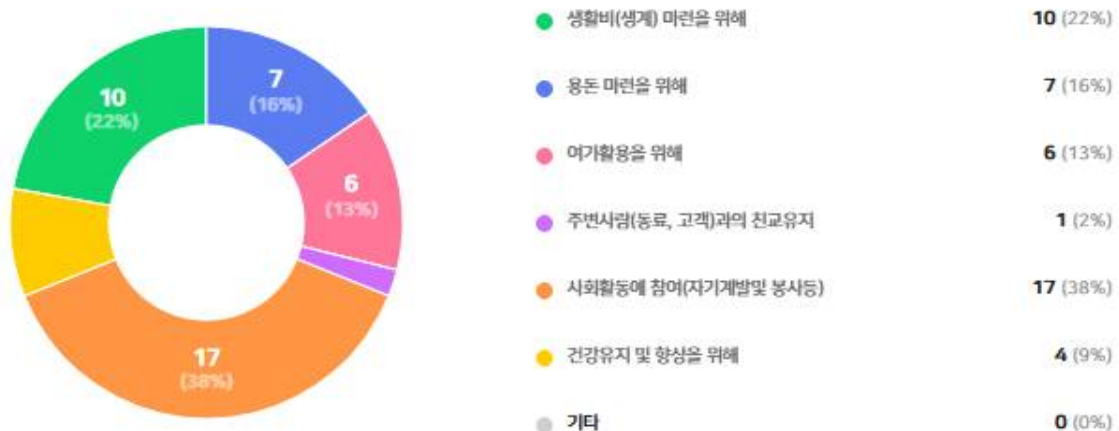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1. 발표문에 관하여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바야흐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재편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반면, 노인의 일자리는 잊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점에서 발표문이 제기한 ‘노인을 단순 수혜자에서 사회적 주체로’ ‘빈곤 탈출과 함께 심리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은 매우 중요한 제안임
- 나아가 이번 조사는 노인복지가 단순히 현금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사회의 주체로 참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효과가 크다는 점, 단순히 소득(노후준비 포함)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충족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자료임. 특히 621명을 조사하고 연령집단별로 비교한 것은 노인실태조사와 같은 정형적인 조사에 비해 매우 흥미로운 시도였음
- 다만 표집에 여성이 적은 것은, 여성의 평균연령과 빈곤률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며 그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가사·돌봄유니온 및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경험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45명 조사결과에서(2025)



사회서비스형 (2025년)	생활비마련	9	자기계발, 봉사	10
	용돈, 노후자금	7	여가활용	8
	기타	1		



○ 가사·돌봄유니온

- 노후설계, 건강강좌,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이 높음. 하지만 근무시간이 맞지 않고 거리가 멀어 모이기 어려움
- 결국 직업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소득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에서 사회적 관계, 사회 활동도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중요
- 다만 민관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지역 기반임을 생각하면 동네별 모임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함

3.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노후희망유니온에 바라는 점

○ 일자리정책의 주무부처가 없음

- 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사실상 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방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이는 노인을 ‘수혜자’로 보고 ‘복지적 관점’만 강조하는 열악한 일자리에 불과

○ 노동부 정책은 재직자에 맞춰져 있음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 :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계속고용 도입, 연령별 (50-60대) 맞춤형 재취업·창업지원서비스, 경력활용 일자리 제공

※ 고용정책기본계획(2023)의 일환으로 고령자계속고용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노후희망유니온

- 전국적 노인단체로서의 비전 수립과 함께 ‘고용’ ‘복지’ 양대 사업을 재정비하면 좋겠음, - 고령자 고용에 관해서는 일자리에 관한 전체적인 상황 파악 및 초점을 잡아서 법제도 개선활동을 펼치면 좋겠음

[메 모]

